



문서번호 : 25-07-복지재정위-01

수 신 : 각 언론사

발 신 :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

제 목 : [공동 보도자료] 야4당·노동시민사회,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

전송일자 : 2025. 7. 16.(수)

전송매수 : 총 2매

국회의원 차규근·윤종오·용혜인·한창민,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,
민변 복지재정위원회, 민주노총,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, 한국노총

배당은 안 들고 초부자 배불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철회하라

야4당·노동시민사회,

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

일시 장소 : 2025. 7. 17. (목) 오후 1시 40분, 국회 소통관

1. 취지와 목적

- 정부가 곧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음. 이재명 대통령은 ‘코스피 5000시대’를 공약으로 내걸고 “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(세율)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”고 밝힌 바 있음. 또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배당소득이 연 2,000만 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[소득세법 개정안\(의안번호 10092\)](#)을 발의함. 이 개정안은 배당성향 35%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배제하고, 2,000만 원 이하 14%, 2,000만 원 초과 3억원 이하 20%, 3억 원 초과 25%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.
- 이처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될 경우, 감세 혜택은 대주주, 고액 자산가 등 ‘초부자’에게 집중될 것임. 대주주의 경우 세율이 거의 절반(49.5% → 27.5%)으로 줄어듦.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시기 도입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

유사한 ‘배당소득 증대세제’에 대해 시장 전체의 배당성향을 크게 높이지 못하고 세수 손실만 초래하였다고 분석한 바 있음. 특히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8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여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를 복원하기는커녕 추가적인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세수 부족을 가속화할 뿐임.

-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4당(조국혁신당·진보당·기본소득당·사회민주당)은 기자회견을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자 함.

2. 기자회견 개요

- **제목** : 야4당·노동시민사회,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
- **일시 장소** : 2025년 7월 17일(목) 오후 1시 40분 / 국회 소통관
- **주최** :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,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,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,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,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, 민변 복지재정위원회, 민주노총,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, 한국노총
- **프로그램**
 - **사회** :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
 - **발언**
 -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
 - 진보당 윤종오 의원
 -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
 - 정세은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
- **문의** :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(02-723-5052)

3.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. 끝.

▣ 보도협조요청서 [\[원문보기/다운로드\]](#)